

윤승오, 700억 규모 道 문화교육복지센터 영천 유치 청신호

<경북도교육위원장>

200억 원 규모 교육청 '영천도서관' 확정
700억 문화교육복지센터 올6월 유치 기대
道, 문화교육복지센터전국 최대규모 예상
윤승오, 융·복합문화복지시설로 확대 제안
영천시, 道교육청 교육센터 유치 건립 환영



윤승오<사진> 경북도의 회 교육위원장이 경상북도 교육청 직속 기관인 가칭 문화교육복지센터(이하 교육센터) 영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道 교육청은 윤 위원장의 교육센터 영천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道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취지의 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 교육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올 상반기 내 영천 유치가 확정될 경우 영천 교육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는 희망적 전망을 내놨다.

교육센터는 특수교육과 학생 문화복지가 융합된 道 교육청 특수교육 공공기관이다. 앞서 윤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의 이같은 교육센터 설립 기초 조사 착수와 관련해 발 빠르게 영천 유치와 연결해 교통 입지, 쾌적한 도시환경, 대도시 접근성 등 영천의 강점을 적극 피력해왔다. 사실상 교육센터 영천 유치에 道 교육청의 관심을 선제적으로 이끌어냈다.

윤 위원장은 또 교육센터의 당초 목적인 특수교육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의 조화,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제안해 그 규모가 700억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교육센터 건립 예산은 700억 원 규모로 공무원 등 종사 인력이 적어도 40~6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속 기관인 센터는 정부 중규모 공공기관 1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게 지역 교육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영천시와 경상북도교육청 간 건립 부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기초용역조사, 중앙



재정투자심사 과정을 거쳐 문화교육복지센터 유치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영천시의회는 순수 시비1200억원을 투입해 건립을 강행하려는 영천시의 새 문화예술회관 조성을 두고 "도교육청 교육센터 유치 건립이 우선 아니냐?"며 사실상 영천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부정적 의견(건립 유보)을 나타냈다.

그러나 영천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와 시민들의 숙원, 최기문 영천시장의 공약 사업"을 이유로 건립 강행 의지를 드러내 건립 여·부를 두고 의회와 충돌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고위공직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북도교육청 건립 협의요청이 있었다. 道교육청 교육센터 건립 부지선정과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3면 장지수 기자

경주·안동·울진 국가산단 착공 빨라진다 예타 조사기간 5개월 단축

정부, 3월말까지 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 발족
-4월 말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후속 지원 대책
경제부총리, 2026년까지 착공, 집중 지원 방침



지난 2022.8.19일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에게 올해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선정)한 전국 15개 국가산업단지(산단) 조기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 지원을 예고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달성·경주·안동·울진 네곳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지정 국가산단에 대해 신속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실시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5개월 단축해 이르면 오는 2026년 착공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추 부총리는 산단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추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산단 지정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경주, 안동, 울진 3곳에 발 빠르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20일에는 이달히 경제부지사를 필두로 투자유치 간담회를 갖는 등 국가산단 추진 방향에 대해 즉각 대응했다.

한편, 경북에는 경주-차세대 원전기술 S·M·R 국가산단, 안동-백신생태계 BIO생명 국가산단, 울진-에너지자립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등 세곳이 한꺼번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경제효과 22조원, 고용창출 8만2000명 등 경북의 미래 혁신성장 선도 산업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게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서 "경북에서 동시에 세곳의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우 기자

어울림으로 행복한 별빛 영천교육

시책 방향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꿈이 되는 미래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새로움을 더하는 교육 지원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YEONGCHEON OFFICE OF EDUCATION

[법원] 영천시 주민동의서 인·허가 악용사례에 제동... 동의서 미제출 인·허가 반려는 위법

고법, 1심(市 승소) 판결도 부당하다 결론
2심 확정되면 市와 참가 14인 손해배상 불가피
市, 상고 여·부 11일까지 법무 지휘 받아 결정
사업자, 최종 (판결)확정되면 수 백억원 손해소
영천시, 또 다른 사업자와도 같은 행정소송 중

법원이 지방행정의 폐기물처리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사업계획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지난달 24일 주식회사(G)(이하 사업자, 원고)가 (피고) 영천시 외 14인의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영천시 등은 사업자(원고)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그동안 주민동의서를 인·허가 기준으로 삼아왔던 영천시의 업무 처리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 외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사업자와도 동일한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업자는 2016년 2월부터 영천시 고경면 일대 기존 공장용지와 건축물 등을 매입해 2021년 6월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사업계획서를 영천시에 제출했으나 같은 해 12월 시가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반려하자 영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은 영천시는 사업자에게 기존 공장 내 잔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면 사업계획 적

합통보(사실상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사업자는 같은 해 10월 9000여 톤의 기존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실제 폐기물처리를 수행하였지만, 이번에는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반려 처분해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 결론에서 영천시의 적합통보 반려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여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영향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민동의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주민동의 사항은 고려 사항이지 영천시의 재량권 행사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게 이유다.

영천시는 이 사건 반려처분 재량권 행사의 주 요지가 주민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 여부에 대한 검토 라면서도 취지와는 달리 주민건강 및 주변 환경영향 여부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오직 보완서류(주민동의서) 미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지침 준수의 공익에 비해 (원고)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과



영천시는 같은 고경면에 또 다른 사업자의 폐합성수지(비닐 등) 폐기물처리업 사업신청을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허가 반려 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이번 G사업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 고경면 석계리)

도하게 제한해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며 최종 결정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앞서 원심에서 영천시가 승소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영천시는 원고에 대한 이 사업계획서 반려처분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영천시(공무원)가 기존 폐기물을 처리하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해주겠다"고 한 위 사실에 대해 "제3의 공무원의 사실확인서는 인정된다"면서도 이같은 (말)사실을 영천시 해당 공무원은 부인하고 있고, 또 적합통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중간 (공무원) 검토자가 이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인 공무원의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는 납득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영천시가 적합통보 반환 전에 민원문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보완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영

천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가 보완 기회 없이 곧바로 반려처분 해 민원처리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 측이 원고에게 사전에 구술로 보완요구를 한 사실과 원고 측도 이를 인지하고 실제 주민동의서를 받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원고의 주장대로 민원처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이 부분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천시는 상고 기일인 오는 11일까지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한 법무부 법무 지휘를 받아 최종 상고 여·부 등 판단할 예정이다. 고법이 1심 판결도 부당하며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영천시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한 만큼 법무부 상고 지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천시는 내부적으로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영천시와 집단 민원을 일으켜 재판에 공동 참가했던 손·최 모 씨 등 고경면 주민 14인들도 함께 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손해소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자 등은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공장 매입과 설비 제작 및 막대한 경비를 투자한데 반해 일부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영천시가 공조해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를 방해하는 등 2년여간 자재비 인상과 시간 허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소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심지어 "15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혀 판결 이후가 더 주목받을 예정이다.

한편, 본지는 지난달 3일 영천시가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행정 입맛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의 잣대로 삼는 등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과 10월 호당리에 2건의 축사(우사) 신축허가를 각각 내주면서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서는 인·허가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이 사건 주민 민원에는 반대로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허가 반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천시는 주민동의서 등과 관련해 앞서 2020.12.12. 환경부로부터 자원재활용과 관련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가 각 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규정하고 이들 조례·지침 등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는 공문(경상북도 환경정책과 14408호)을 하달했으나 오히려 더 강화해 왔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원 평균재산 10억8198만 원... 이갑균 의원 가장 많이 늘어(2억1870만 원)

시·군의회 평균 9억1500만원 전년 대비 4000만원↑
경북 시·군의회 재산 1위 장세규 67억6098만원
영천시의원 재산 1위 권기한 62억2096만 원
최기문 시장, 10억1684만원, 1억8362만원 늘어
이만희 의원, 28억7130만원, 2억8823만원 늘어

영천시의회 12명의 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권기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이갑균 의원으로 확인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10억168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362만원 증가했고, 이만희 의원도 28억71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8823만원 늘었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춘희)는 30일 공직유관단체(8명)와 시·군기초단체의회 의원(287명) 등 295명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2022.1.1~2022.12.31까지)의 변동사항을 2023.2.28까지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다.

관할 신고대상 재산액 평균은 9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00만원 증가했고, 시·군의회 평균은 9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늘었다.

재산 규모는 10억원 이상이 68%(201명)로 그 중 1억원~5억원 미만의 경우가 33%(96명)로 가장 많았다.

전체 29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78명(60%)으로 증가 평균은 1억1800만원이고 감소자는 117명(40%)으로 평균 감소액은 1억800만원이다.

한편, 영천시의회 의원 12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권기한 의원은 62억209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도내 287명의 의원 중에서도 재산액 2위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이갑균 의원으로 2억1878만원 늘었고, 12명의 의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배수예 의원으로 나타났다.

영천시의원 중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모두 6명(권기한, 박주학, 김종욱, 김선태, 이갑균, 이영우)으로 증가 순위는 이갑균(2억1878만원), 김종욱(1억1727만원), 권기한(9604만원), 이영우(448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 배수예 의원의 신고 재산액은 △(-)2억8554만원으로 도내 287명 중 가장 낮았고, 권기한 의원은 62억2096만원으로 도내 의원 중 재산이 많은 2위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이갑균 의원의 경우 대부분 증가한 내역은 토지 가격 변동으로 파악됐으며 본인 소유 토지만 32필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권기한 의원으로 18필지 토지를 소유했다.

道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6월 말까지 국토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 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해 재산 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처분, 해임, 경고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장지수 기자

■ 2023년 공직자 재산등록 (영천시) 현황

<단위 : 천원>

이름 / 소속	순위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비고
이만희 국회의원	2	2,871,306	475,778	187,540	3,159,544	288,238 ↑
최기문 영천시장	7	833,214	218,953	35,325	1,016,842	183,628 ↑
하기태 영천시의원	5	1,283,387	124,461	223,363	1,184,485	↓
우애자 영천시의원	9	617,657	38,010	195,455	460,212	↓
권기한 영천시의원	1	6,124,917	612,035	515,991	6,220,961	96,044 ↑
김용문 영천시의원	15	39,356	-12,606	14,396	12,356	↓
이영기 영천시의원	12	355,082	71,021	111,840	314,263	↓
박주학 영천시의원	11	316,165	5,625	4,017	317,773	1,608 ↑
배수예 영천시의원	16	39,715	-320,756	4,507	-285,458	↓
김종욱 영천시의원	3	2,322,148	470,776	353,500	2,439,424	117,276 ↑
김상호 영천시의원	14	36,684	-588	223	35,873	↓
김선태 영천시의원	4	1,236,897	266,752	214,965	1,288,684	51,787 ↑
이갑균 영천시의원	8	397,654	288,595	69,808	616,439	218,785 ↑
이영우 영천시의원	10	334,029	42,421	-2,388	378,838	44,809 ↑
이춘우 경북도의원	13	470,339	-599,785	392,945	263,499	↓
윤승모 경북도의원	6	909,687	35,475	-143,127	1,088,289	178,602 ↑

<자료 : 공직자윤리위원회 2023.3.30 발표>

윤승오 道교육위원장, 700억 규모 道 문화교육복지센터영천 유치

1면에 이어



그동안 정부 공공기관은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혁신도시에 한정해 이전 돼 왔다. 그러나 이번 道 교육청 문화교육복지센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교육·복지 등을 통한 영천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공공기관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같은 기대는 최근 확정된 강원도교육청의 특수교육원 건립

예산이 63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영천에 투입될 '문화교육복지센터'는 예산 규모나 기능 면에서도 전국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강원도의 경우 특수교육원의 유치를 두고 원주·춘천·강릉시가 서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 왔다. 논란 끝에 강원도 교육청은 본원의 경우 춘천시에, 나머지 원주·강릉 두 도시에는 본원을 각각 설립하는 방식으로 분산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해 각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의 경우 인구수 36만 명의

강원 최대 도시로 학생 수, 교통 접근성 등 우월성을 주장하고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등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모로 인한 과열 유치가 오히려 유치 도시 간 불협화음만 양산했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의 공모로 촉발된 특수교육원 유치전이 지역 간 갈등의 불씨로 확산하자 유치 도시 간 감정만 상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윤승오 교육위원장은 이번 교육센터 외에도 영천에 또 다른 선물을 안겼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道 교육청 역점사업인 '경상북도교육청 영천도서관' 신규 건립 계획이 올해 초 확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과 윤승오 위원장은 4월 추경예산에 도서관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신설 추진 배경은 영천시 인구, 학생, 평생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영천시민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 직속 도서관 신설 도서관은 200억 원 규모로 이미 영천시 망정동에 부지를 확정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열람석 550석, 종사원(공무원) 수 약 10~24명(공무직 제외)으로 하여 교육 정보, 평생교육과 문화교육의 기능을 종합해 오는 2026년 6월 개관할 방침이다. 윤승오 위원장은 "이번 신설 道

도서관 설립 확정 그 명칭이 '영천도서관'으로 경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위원장이자 교육복지 정책과 지역발전에 동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또 "경북도교육청 직속 기관인 문화교육복지센터영천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영천 유치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윤승오 경북도교육위원장은 또 이번 교육센터 영천 유치 노력과 관련해 "경북도교육청 영천도서관 건립 영천 확정과 함께 오는 상반기 문화교육복지센터(특수교육) 영천 확정이 순탄할 수 있도록 영천시민들의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화신' 국내 복귀... 경북도 1% 가능성도 놓치지 않아

영천 하이테크지구 1만 8700평 부지 첫 입주 800억 투자, 123명 신규일자리·350여명 추가고용 기대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1만 8700평 부지에 자동차 경량화 및 전기차 부품 제조시설 투자를 위한 화신 신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첫 입주기업인 화신은 2015년 완성차 제조사 등의 부품 조달을 위해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로 진출했으나, 협력업체 사업축소와 현지 경제사정 악화로 국내에 복귀했다. 화신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8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및 자동차 사시 경량화 제조시설 등의 신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道는 이를 계기로 37만평의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분양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번 공장 건설을 통해 12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연계 협력사에서 350여명의 추가 고용도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은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준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윤승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기문 영천시장,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정서진 화신 대표이사(사진 가운데)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출범후 투자 유치 100조원을 목표로 1%의 가



능성만 보여도 공략한다는 각오로 LG 화학, LG이노텍, SK실트론, 삼성SDI,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의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20년부터 국내복귀제도를 통해 10개 기업이 3500억원을

투자했고 투자금액의 22~50%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지원했으며, 53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했다. 도는 2021년 9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내복귀기업에게 경북도

소유의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료 감면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 △고용 및 첨단업종 여부에 따른 금융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한우 기자

경북교육청, 1000여명 식목 행사...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신도시 내 수변공원과 분청 청사 주변에서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나무 심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기후 위기 대

응과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추진됐다. 교육청 본관 경학문 앞 화단에 배롱나무 기념식수 행사 이후 '신도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행복 숲 만들기' 주제로 도내 기관, 단체,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내 나무 갖기 캠페인으로 도청 신도시 수변공

원 부지에서 탄소 저감 수종인 소나무를 심었다. 이어 본관 뒤 화단 유희지에는 남경화, 목수국, 목련, 영산홍, 석류 등 각종 꽃나무와 유실수를 식재했다. 경북교육청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회용 컵 없는 경북교육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경북 우수 학생선수 유입 꾸준히 증가... 전국대회 성적으로 입증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운동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북체육중고등학교 등 전국 단위 모집 학교를 중심으로 우수 학생선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입한 학생선수는 2021년 564명, 2022년 661명, 2023년 6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외부 진출 학생선수는 한 해 평균 250명이며 2023년 3월 현재는 3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교육청은 이같은 현상을 학교운동부 시설환경 개선, 운동부 노후장비 교체,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및 고용안정 등의 일관된 학교체육 지원정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학교운동부의 학사관리 측면에서도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학생선수 출석 인정 결석일수 준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의 대회 출전 제한 등 학생선수의 학력 보장을 강화하고, 학생선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학생선수의 중도탈락 예방 정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의 학교 체육정책은

지난 21년 경북에서 개최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43개, 은 38개, 동 56개로 고등부 역대 최고 성적 수립에 이어 22년 울산에서 개최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47개, 은 39개, 동 46개로 고등부 역대 최고 성적을 2년 연속 수립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청통 휴먼스타월드조성사업 '진실공방' 11년... 전·현직 사법관 개입 의혹

“10원도 내지 않은 자들이 23억 원 뺏어 가”

**원사업주, 대구지검에 호소... 검찰 수사착수
“사채 5억여 원 썼다가... 사업부지 빼앗겼다”
“처음 투자한다 했다가 대출금 갚아라” 협박
“사채업자, 회사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돌변”
“전·현직 경찰 현금 편취·뇌물수수 정황 폭로”**

2012년 경북 영천시 청통면 관광 휴양시설(영천휴먼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11년 째 이어져 온 공갈·사기·협박 사건이 재점화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전·현직 경찰 등의 현금 편취·뇌물수수 의혹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5일 최초 사업주인 A 씨(영천) 등에 따르면 "사업 초기 자금이 어려움을 겪자 이를 악용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접근한 사채업자 등 브로커들이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공갈·협박으로 사업체를 빼앗아 11년째 싸우고 있다."면서 "지난달 15일 대구지방법검찰청에 이들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 씨를 불러 1차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16년 당시 『사업 과정에서 사채업자 개입, 부지 소유권을 두고 '복마전', 사법기관도 유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2016.6.20 지방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왔던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또 당시 검·경 조사과정에서 "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재수정해 올려라"는 대구지방법경찰청 조사관의 녹지록(4건)이 제시되는 등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막아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사이비기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영천휴먼스타월드 사업부지 2023.4.1 현재 모습

자) 사건을 봐주는 검·경 조사관들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일기도 한 사건이다.

이번 A씨의 고소장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전직 경찰이 뇌물을 받고 금품을 편취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피고소인 8명 중 수사 조사관 2명이 포함돼 뇌물수수와 공문서 허위작성죄로 고소되어 있다.

이 때문에 A씨의 주장대로 자신의 사업(부지 등)을 가로채기 위해 "개발업자, 사채업자, 건달, 사

이비 기자, 사건 브로커 등이 일부 검·경 조사관들과 협업으로 사건 진행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지 이번 사건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A 씨의 고소장과 이 사업 투자자들에 따르면 "현재 사업체(부지) 경매 후 대법원에 A 씨의 근저당권(가짜채무 주장)과 관련해 23억 원의 배당금이 계류 중이지만 이들(피고소인) 사이에서도 서로 배당금을 차지하기 위해 복마전이 벌어져 경매 후 6년이 지나도록 물고 물리고 있다"며 이번

고소로 이들의 공갈 사기 혐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23억 원의 근거에 대해 A 씨 등은 이들 일당이 당시 공동투자 명목으로 70억 원을 투자하고 그 동안의 비용(토지매입비, 인·허가, 공사 등) 35억 원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지분은 50대 50으로 하자며 우선 1억 원을 당시 법인(탑건축)으로 송금한 뒤 수차례에 걸쳐 1천만 원~1500만 원씩 입금하면서 시간을 끈 뒤 갑자기 사채로 둔갑시켜 공갈과 협박

으로 5만여 평의 사업용지에 공동 담보근저당을 설정하게 한 후 이를 미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경매를 넣겠다는 등 압박해 빌리지도 않은 23억 원의 근저당을 합의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23억 원이 사업부지 경매 근거가 되어 지난 2016.9.5 일의 경매처리 됐다.

A 씨는 실제 이들이 서로 짜고 우리(A 씨)를 사채업자 4명에게 5억 원 가량을 차용하게 하고 선이자 공제 후 2억7750만 원을 받았

는데 그 10배 가량인 23억 원을 강요로 근저당 하게 되었다. 너무 급박해 할 수 없이 이들을 상대로 사기, 공갈, 감금, 대부업법 위반으로 대구광역수사대에 고발하였지만 다시 돌변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사업체 인수 약속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로 소를 취하했는데 이들은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과 같은 편에서 돈을 빌려준 소 외 B 씨는 23억 원에 대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

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A 씨 등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확인서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의 대여금 5억 원이 전부인데 이들이 A 씨 등을 속여 13억 원의 근저당을 먼저 설정케 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를 앞세워 다시 13억 원의 근저당을 말소하는 명분으로 2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며 "자신이 빌린 5억 원 외에 이들 일당이 돈을 빌려준 것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소인 중 C 씨는 "이같은 고소 사실은 알고있다"면서도 "나는 사건 내용을 잘 모른다. 나는 A 씨에 대한 23억 원의 근저당에 대해 잘 모른다. A 씨가 자금이 없어 여러 사람을 이용해 잘못된 (A씨) 자신이 해 놓고 원망만 하고 있다. 2013년 말경 A 씨가 대출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후배(B 씨)에게도 받을 돈 있으면 받고 빠지라고 한 후 나는 다른 현장 일로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리거나 자신도 맞고소로 전체 사건만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A 씨의 잘못된 것이 아니면 A 씨의 사업체(부지)를 삼키려는 일당들의 공갈·사기인지는 이번 검찰 수사에 달렸다.

이 사건에 깊숙이 관련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상주추모공원건립 난항... 용역 최종 보고서, 의도적 누락 발표 드러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서 '재검토사업' 분류

상주시, 민원 발생 가능성 고의로 최종보고서 빼 문경시, 건립반대추진위, 건립 전면 백지화 주장

상주시가 '상주추모공원건립'을 추진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건립예정지가 문경시와 500여m 거리에 있고 바로 연접지역(문경1~5동)에 문경시청이 붙어있다.

이 때문에 문경 측 건립반대추진위는 "문경시 점촌동에 문경 인구의 절반이 넘는 4만 명이 살고 있어 생활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상주시가 연접지역(문경) 주민들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건립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 집회 등으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상주시가 건립을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조사항목을 누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거세졌다.

지난 2021년 12월 27일 발표한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 발표자료에서 타당성 검토항목 중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 부분만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그것도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적정후보지 선정과 시설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사실을 은폐하여 종합결론을 발표한 것이다.

더군다나 (원본) 용역보고서 중 타당성 검토 총괄부분 '주변 지역 여건 측면' 민원 발생 가능성 검토항목에서 "문경시 내 도심지와 인접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도 상주시가 발표에서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양호한 것으로 보고서와 다른 발표를 한 것이다.

특히 (원본) 보고서에는 ●:양호, ▲:보통, x:불량 판정 중 민원 발생 가능성 부분은 아예 불량처리하였는데 상주시는 이 부분만 삭제하고 발표해 의도적 민원 발생 문제점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문경미래발전연구소 김원식 대표는 "용역회사의 원본 보고서에는 분명히 '인접 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을 명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은폐해 마치 아무런 민원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주시의 은폐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조작된 자료를 상주시가 시추진위원회 앞에서 최종보고 발표자료로 사용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허위 설명한 것은 상주 시민들마저도 기만한 행위"라며 "건립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상주시의 은폐 행정이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상주시는 거짓

답변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2021년 12월 27일 발표한 PPT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자 지난 27일 "27일 발표한 PPT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 자체마저 부인했기 때문이다.

김원식 대표가 확고해 두었던 27일 발표 PPT 자료를 제시하자, "저희(상주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므로 부존재라 답변했다"고 발뺌했다가 뒤늦게 "상주시가 발표하고 주체인 것은 맞다"라면서 자료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상주추모공원건립』 반대 문경시 추진위 대표를 맡은 고정환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은 "처음부터 문경시 민원과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용역보고서 발표자료까지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련자 책임 문책과 동시에 (상주시) 스스로 타당성 조사까지

은폐 발표한 상주추모공원 건립을 즉각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상주시는 나한리 매봉산 자락 9만여㎡ 터에 봉안당(유골 보관 시설) 1만 기와 자연 장지(수목장립) 1만2000기를 조성하는 공설추모공원 사업에 총 257억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립예정지가 500M 내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문경시(점촌동 주민)와 상주시 점경지역과 맞물리자 두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이 1년여간 빚어져 왔다.

이같은 갈등이 지속되자 행안부가 '2023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상주시와 문경시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설추모공원 건립을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해 사실상 건립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장지수 기자

청도군, 재정 1조원 시대 위한 세수증대에 박차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확충 체납세 징수... 세정회의 개최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달 28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 달성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군과 읍·면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읍·면 세정회의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홍보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요청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전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신뢰받는 조세 행정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체납 징수를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번호

판 영치 강화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 전자계약제도 정착, 회계직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신속한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데 노고



를 치하하며, 올해도 본청 및 읍·면 세무부서와 협업을 강화하여 세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한우 기자

청도군 ‘떡깨비’ 앱 이용... 할인 또 할인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공공배달 앱 ‘떡깨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지난 4일 밝혔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1.5%의 낮은 중개 수수료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할인 구매한 청도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수·일요일 외의 모든 요일이 1만 원 이상 배달 주문 시 3천 원 할인되고 봄맞이 이벤트 선착순 3천 원 할인, 4월 10일부터는 배달비 2

천 원 및 매주 금요일 4천 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쿠폰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가맹점 신청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떡깨비 사장님’을 검색한 뒤 해당 사이트 혹은 떡깨비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떡깨비’ 앱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다.

김효정 기자

청도군, 국비예산확보 전략 최재영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특강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3일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와 인적 네트워크 활용하기 위해 최재영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을 초빙해 특강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올해 예산안(639조 원)의 의미 및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략적 가치와 재정 현안 전반에 대한 설명이다.

또 중앙부처 방문부터 사업의 당위성과 논리를 제시하는 법, 기재부 예산 심의 마지막 일정인 8월 중순까지 인적 네트워크 총동



원등으로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전략들이다.

최재영 국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장, 국토교통예 산과장 등 주요 재정 분야 요직을 거친 관련 전문가이다.

박한우 기자

청도군, 아쿠아로빅으로 관절건강 지켜요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4월부터 4개월간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수영장에서 군민 40명을 대상으로 관절 건강 수준운동(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번 수준운동은 물의 부력을 이용해 물속걷기, 유산소운동, 도구를 이용한 근력운동 및 수중 체조, 스트레칭 등으로 구성돼 7월달까지 운영된다.

또 신체측정, 체성분분석, 통합건강증진교육(운동, 영양, 금연)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 만성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청도군, 마늘·양파 드론공동방제 6억 투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달 31일 각남면 예리리에서 마늘·양파 방제를 시작으로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를 준수한 적기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늘·양파 현장방제 연시회를 개최했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20일부터 한달간 마늘·양파 드론방제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 접수를 받았다.

군은 월동 이후 발생이 많아지는 양파 노균병, 마늘 잎마름병에 대한 방제를 위해 신청면적 25ha를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2회에 걸쳐 드론으로 방제할 계획이다.

이날 시연회는 농작물병해충 드론공동방제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 2년 차이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지역농협과 지자체가 협력해 마늘, 양파 작물에 한해 드론 병해충 방제료

전액 및 농약대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지역농협에서 벼 병해충 드론방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접수된 필지는 병해충예찰과 각종 기상 여건과 7~8월 중 벼 도열병과 벼멸구, 흑명나방 등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단기간에 공동방제하여 벼 병해충 확산 조기 차단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사랑받고 있는 청도 풍각면 반찬 냉장고

이웃과 나눌 마음으로 시작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풍각면 사무소의 '사랑애 채움·나눔 냉장고'가 사랑받고 있다고 4일 전했다.

풍각면 소재 천지식당(대표 김경순)에서 손님을 위한 밑반찬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넣어 주기로 약속하고 기부한다.

밑반찬은 사무소 안 냉장고에 보관되어 필요한 분을 위해 준비됐다.

또 맞춤형복지팀 및 생활지원사 선생님의 가정방문을 통해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되고 있다.

김경순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



하게 밑반찬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청도 각북면, 제5회 벚꽃축제·경로잔치

새마을3단체 후원 5년만에 개최

청도군(군수 김하수) 각북면은 지난 1일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벚꽃축제 및 경로잔치를 각북면 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회 주최와 각

북면 주관이며 새마을3단체 등의 후원으로 5년만에 개최돼 면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날은 김하수 청도군수, 이만희 국회의원, 김효태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이선희 도의원 등 주요내빈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효정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 상주 경북농업테크노파크 청사이전 기공식

본격적인 착공 알리는 시삽 퍼포먼스로 진행

경북도는 지난 4일 상주시 사벌국면 삼덕리와 화달리 일원 농업기술원 이전부지에서 청사이전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908년 권업모범장 대구출장소를 시작으로 115년의 역사를 가진 농업 중추기관으로 1971년 대구 북구 현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2741억원으로 부지면적 96만9387㎡, 건축연면적 4만432㎡이며, 지상 3층 본관동과 27개 부속시설을 갖추고 2026년

12월 완공해 상주로 이전 할 예정이다.

청사이전 공사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연구포장공사와 건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며, 본관 등 건축물은 국제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지난해 3월 자연과 조화를 의미하는 "Beyond HoriZon" 설계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장, 상주시장, 도의원, 농업관련기관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추진 경과보고, 기념사, 청사이전공사 설명과 본격적인 착공을 알리는 시삽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장지수 기자



최근 트렌드 맞춘 2023 상주농업기계박람회... 농용로봇 중점 전시

농기자재 산업의 활성화 해외 수출기반 조성

경북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상주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2023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주농업기계박람회는 2008년부터 시작해 코로나로 인해 4년만인 올해는 8회째이다. 이번 박람회 슬로건은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이다.

이번 박람회는 경북도가 후원하고 상주시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하며 2만3300㎡ 면적에 760여개 전시부스와 56개 부대행사 부스, 운영부스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 농기계업체는 240개사이고 트랙터 등 농기계는 400여 기종이며 과수, 경운·정지, 농산가공, 수확용, 이앙·정식·파종, 임업, 재배관리, 축산 등의 농기자재도 전시했다.

도는 박람회에서 최근 변화된 농기계 트렌드에 맞춰 인공지능기술(AD)이 적용된 자율주행 및 친환경 농기계, 스마트 ICT 시설기자재를 비롯한 농용로봇 등을 중점 전시하고 국내외 최첨단 농기자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대행사로는 시설원에 스마트 팜 수출활성화 정책 세미나, 농기계 연구개발 동향 세미나, 가상 농기계 체험, 승마로봇체험, 농기계 연시장 등이 운영된다.

행사 첫날인 4일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농식



품부 혁신정책관, 산업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경북도의원, 상주시장,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장지수 기자

2023 경북 기능경기대회... 48개 직종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도내 9개 경기장 분산 개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5일간 도내 9개 경기장에서 '2023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대회는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김준태)에서 주관하는 숙련기술인의 경연장이다.

도내 9개 경기장은 구미, 경주 등 6개시와 1개 군 지역으로 금오공업고등학교, 신라공업고등

학교 등이다.
기간동안 산업용드론제어, 모바일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포함해 48개 직종에 369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된다.

경북 기능경기대회는 1966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능경기대회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기술인재의 육성 발굴과 기술 향상은 물론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기여하여 왔다.

지방대회 입상선수에게는 상장과 메달 및 상금이 지급되며, 오는 10월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북의 대표선수로서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박한우 기자**

대구대학교-경산시,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 MOU... 40억 원투입

대구대(부지 제공)... 경산시(동물치유센터 건립) 조현일 시장, "최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육성" 박순진 총장, "반려동물산업학과 인재 양성"

경북 경산시가 대구대학교에 40억 원을 투입해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조현일 경산시장과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이날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경산시와 대구대 등에 따르면 대구대 측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산시는 건축비 30억 원과 기자재 설치비 10억 원 등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동물보호실, 교육실, 치료실, 입양실,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 기능의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하기로 협약했다.

이날 협약은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 ▲반려사업 공동 발굴과 추진 ▲반려동물 전문지식과 인력·시설을 활용한 사업협력이 골자다.

특히 두 기관은 반려동물의 안전관리와 복지, 체험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동물보호 복합문화공간으로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다. 치유센터는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안전하게 구조해 보호관리하고 입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대학교는 지난해 반려동물산업학과를 신설해 동물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어 이번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으로 맞춤형 교육과 현장 실습이 가능해졌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반려동물산업학과가 있는 대구대와 경산시의 관학협력으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시가 전국 최고의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 8개 시군 통합 로컬 주거단지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삶·일자리·문화·교육 결합된 창의적인 천년 주거단지 조성



천년건축사업(경주조감도)

경북도는 삶·일자리·문화·교육이 결합된 로컬 주거단지로 문화적 가치를 위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 8개 시군의 8개소 사업을 선정해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 결과 13개 시군에 25개소가 접수된 사업 중 기획의 방향성, 건축 및 친환경 기술, 운영 및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및 지원 등의 기준을

평가해 천년건축 자문위원회의 자문, 심사를 통해 8개 사업을 선정됐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정립과 지역상생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삶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 사업을 통해 삶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로컬 주거 단지를 조성해 경주 양동마을, 안

동 하회마을처럼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창의적인 천년 주거단지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청년농업 창업과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도래에 따라 적극적인 유입책이 필요하고 지방이주에 대비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촌 △산업연계형 등 지역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주거단지를 계획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①포항시

동해면 청년보금자리 및 복합 은퇴촌 ②경주시 천군동 복합 휴양형 은퇴촌 ③김천시 농소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합 은퇴촌 ④구미시 양호동 금오공대캠퍼스 혁신파크 연계사업 ⑤문경시 마성면 활영지 인근 예술인 마을 ⑥경산시 백천동 도심지 인근 예술촌 ⑦고령군 다산면 인근 산업단지 와 연계한 상생마을 ⑧성주군 선남면 인근 대도시와 연계한 생활 SOC 조성이다. 박한우 기자

김천시, 농촌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 4월 1일부터 투입

캄보디아 52명, 라오스 48명 부족한 농촌인력확보 꾀

김천시(시장 김중섭)가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근로자 국내(농촌) 일자리 마련에 계절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선정돼 쿼터 100명을 확보하면서 부족한 농촌 인력확보를 위한 꾀 걸음이다.

따라서 김천시는 계절근로자

업 연장선에서 지난 27일 캄보디아 52명을 시작으로 30일 라오스 48명을 추가 확보해 지난 1일부터 8월말까지 하루 단위로 총 100명이 농작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날 시는 캄보디아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개최하고 본격 농촌일자리 지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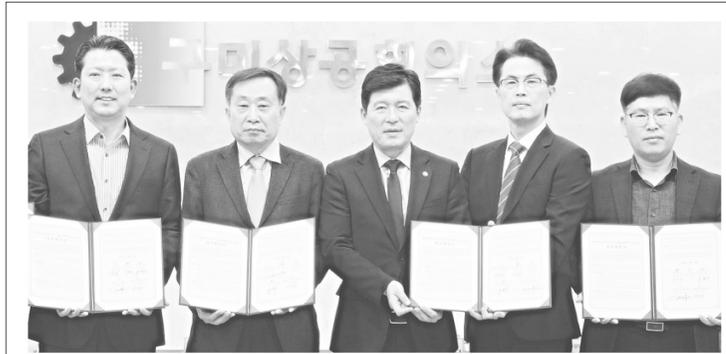
특히 시는 캄보디아 노동부와 직



접 교섭으로 계절근로자에게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해

주기로 하고 이들에게 열심히 일 해 줄것을 당부하면서 고질적 농

촌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박한우 기자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가운데)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랩 팩토리로 구미산단 미래산업 대전환 실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사업 유치 설명회

구자근(구미 갑) 의원이 "구미 산단을 탄소 소재·부품 사업화로 빠르게 변화시켜 산단의 미래 산업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구 의원은 28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자신했다.

이날 설명회는 구자근 국회의원이 직접 주최하여 도레이첨단소재를 비롯해 구미 산단에 입주한 탄소소재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심

유탄소나노과와 의원실이 직접 협력해서 기획하고 경북 구미의 가능성을 여실히 담아낸 신규 국비사업"이며, "본 사업을 통해 탄소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를 비롯해 향후 인증 검증기관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비가 지원되는 탄소 소재·부품 장비 구축 및 사업의 총사업비 330억 규모다.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구자근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최종안에 반영되어 상반기 내 공모 및 선정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 경북도,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업무 협약 체결식도 가졌다.

장지수 기자

경북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4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경북도가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고 있다.

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한 이자 전액이 지원된다. 그동안 총 7205명의 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고 대구·경북 소재 대학 재·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 취

업한 졸업생이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구간 이하이거나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며,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하면 된다.

오는 6월말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을 확정해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차지원 신청안내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경북도 교육협력과(☎054-880-4565)나 행복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정 기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

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했다.

전년도는 616명(790ha)을 대상으로 1200백만원(도비180, 시군비420, 자부담 600)을 지원 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로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해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자격이 주어졌고 선정자에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에 근거한 청년의 정착지원과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육

중기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 지원

경북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기업 인지도 상승과 매출 향상을 돕기 위해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올해 2억 6674만원(도비 2억 4000만원, 기업자부담 2674만원)지원금에 총 10개 기업(제품디자인 4, 브랜드디자인 6)을 모집한다.

제품디자인은 기업 당 최대 300만원까지, BI개발과 브랜드 적용 패키지 등 브랜드 개발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개발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김효정 기자



농업인 위한 안전·농작물재해 보험 2종... 국·도·시 함께 지원

보험료 85%(국비, 도·시비) 지원 지역농협, 조합원 5~7% 지원

영천시는 농업인안전보험료·농작물재해보험가입 2종 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고령화, 농기계·농약 사용 등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 증가 추세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사업비 약

1억5400만원을 확보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의 농업인이 작업 도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1년 단기 상품으로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때 기본 보험료(5만8900원~18만3440원)의 70%(국비50%, 도·시비)가 지원되고 농가는 산출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된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으로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 보장된다.

또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상담 및 가입을 지원 한다.

보험료의 85%(국비, 도·시비)는 지원하고, 지역농협에서도 조합원에게 5~7%를 지원해 가입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8~15%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작물에 대해 정부가 38~60%, 지자체 15~40% 지원하며 이외 벼·맥류,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류는 정부가 50%, 지자체가 15~40%를 지원

한다. 작물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율이 상이하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 품목에서 5개(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가을배추, 단호박) 품목이 추가돼 '23년 기준 경북 52종(전국 70종)이며, 신규 품목을 꾸준히 추가해 27년까지 8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영천 뉴스타수출포도 작목반, 샤인머스켓 대만 수출

5~6개월간 특수방식 저장한 프리미엄 샤인머스켓 3.6톤

영천시는 뉴스타 수출포도작목

반(반장 신길호)이 프리미엄 샤인머스켓 3.6톤을 대만으로 수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뉴스타 수출포도작목반은 샤인머

스켓 수출을 위해 조직돼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도 조성했다.

작목반은 지난해 10월 수확한 샤인머스켓을 5~6개월간 특수 방식으로 저장해 지난달 24일 대만으로 수출했다.

수출된 상품은 최근 kg당 1만 7500원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6300만 원 상당이다.

작목반은 대만이 영천 샤인머스켓의 인지도가 높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철저한 품질관리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제78회 식목일 나무 7000여 본 식재



영천시는 지난 4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아해 금강산성 등산로(그린환경센터 입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편백 및 자산홍 등으로 7000여 본이 식재됐다.

이후 영천소방서와 합동한 산불예방캠페인이 진행됐다.

행사는 영천시가 주최하고 영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완산동 통장·주민연합회 및 공무원 140여 명이 참석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바퀴 달린 1톤 목욕탕 전달

영천시는 지난달 29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최신 목욕시설을 갖춘 이동목욕차량을 전달했다.



시는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 200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2.5톤 차량을 개조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했으나 차량이 노후화되어 쾌적한 환경의 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욕서비스에 용이하도록 개조된 1톤 차량을 전달하게 됐다.

이동목욕서비스는 영천시종합사

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오지마을 위생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읍·면의 위생관리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이날 전달식은 영천시 대장면에서 최기문 영천시장과 목욕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이동목욕차량의 기능과 편의성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귀농인 창업기반조성사업... 12일까지 신청

초기창업기반조성 2500만원 지원

영천시는 귀농 초기 필요한 실질적 영농기반조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는 귀농인 창업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귀농인 창업기반조성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10개소를 모집한다.

사업비는 5000만원(시비 50% 부담 50%)으로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버섯재배사 등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및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신규귀농인 영농정착 기초교육을 수료한 영천시 귀농인으로, 귀농신고한 지 5년 이내이거나 전일 주소

가 영천시 관내 동지역으로 귀농신고하지 못한 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12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054-339-7647)으로 문의하거나, 영천시 홈페이지(<https://www.yc.go.kr/>)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효정 기자

3일부터 관내 택시 결제 영천사랑상품권 카드로

영천시는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 3일부터 택시요금을 '영천사랑카드(카드형 상품권)'로 결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드형 영천사랑상품권은 관내 운행하는 영천 개인택시 204대 및 법인택시 3개사(125대) 만 가능하다.

시는 상품권 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택시 카드결제업체인 DGB유페이, 영천사랑상품권 전용 카드사인 NH카드 및 BC카드와 함께 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시스템 연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지난 3

일부터 결제가 가능하다.

영천사랑카드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관내 농·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각 지점에서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시는 카드형 영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통해 상품권 이용 편의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행복선생님 직무스트레스 관리교육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애경)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취업여성 직무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여성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고충을 살피고 갈등 해소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교육대상은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행복선생님 24



명이며 교육은 매일 2시간씩이며 나와 타인의 이해, 생각과 표현의 차이, 직무 스트레스 관리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효정 기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신청

영천시, 21일까지

영천시 올해 신규시책으로 '2023년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선정된 청년근로자에게 분기별 8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이



며 병역특례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2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천상공회의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효정 기자



금호초병설유치원, 유아흡연예방교육... 노담 홍보대사

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김철연)은 지난 3일 영천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유아흡연예방교육 실시했다. 이날은 고운반 교실에서 만3~5세 유아들로 '노담 건강해져요' 노래도 부르기와 율동하기, '노담 밴드야 고마워' 동화 듣기로 담배의 유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대창초, 봄이 피는 화단... 일석삼조 효과

대창초등학교(교장 박중희)는 지난 3일 학교 화단 환경정화에 나섰다. 교직원과 전교생이 참여해 기존 화단에 자리잡은 묵은 풀을 정리하고 봄 꽃을 심었다. 이날 봄 꽃 심기는 학년별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과 연계해 학습, 학생들의 정서 순화, 환경개선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안초 병설유치원, 그로우 팻으로 자연과학 배운다

북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이강수)은 지난 3일 식목일을 맞아 유·초이음교육의 일환으로 '혼자서도 잘 자라는 그로우 팻 식물 키우기' 체험을 실시했다. 체험에 앞서 수업재료와 화분 조립 및 식물을 심는 방법을 익혔다. 씨앗을 심은 후, 자동급수되는 화분 과학 교구를 조립하고 연결하며 급수과정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녕초,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 공개수업

신녕초등학교(교장 임진성)는 지난달 28일 1학기 학교 설명회 및 학부모 공개수업을 개최했다. 먼저 이날 자녀가 있는 각학급에서 이뤄진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본교 체육관에서 드론 공연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부모회 조직에 대해 논의했다.



영안중, 학교폭력예방교육 특별교육주간 운영

영안중학교(교장 정철현)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한 주간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의 주제는 '친구야 미안해, 나의 사과를 받아줘서 고마워'이다. 활동중 언어문화개선교육의 일환으로 평소 미안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어울림 교육의 날'에는 초콜릿을 만들어 친구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보냈다.



영천여고,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 유튜브 채널 게시

영천여자고등학교(교장 신덕섭)는 지난달 30일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활동 설명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경북예비미래학교 지정,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영특한 탐구활동 운영 등 학교 특색사업 및 주요 교육 활동으로 영천여자고등학교 유튜브 공식 채널에 게시했다.



영천여중, 1학기 학교교육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

영천여자중학교(교장 김경숙)는 지난달 30일 소강당에서 60여명의 학부모님들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1학기 학교교육설명회 및 학부모연수가 개최됐다. 먼저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주)생각연구소 대표 김기임 강사가 학부모 연수를 진행했다.



영천중, 20여가지 프로그램... 학생들 특기·적성 위해

영천중학교(교장 김정남)는 지난 3일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20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매주 월요일 방과후 시간과 토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해 악기 연주(오케스트라, 난타, 밴드 등)와 스포츠 활동(축구, 탁구, 농구, 배드민턴), 메타버스, 피지컬 컴퓨팅 강좌를 진행한다.



청통초, 임고서원 예절체험학습 실시

청통초등학교(교장 권동환)는 전교생 3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임고서원충효문화수련원에서 '임고서원 예절교육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체험학습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편성해 포은 강의, 다도예절교육, 임고서원투어, 전래놀이, 문화예술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임고초병설유치원, 올바른 습관 만드는 교통안전교육

임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강석중)은 지난달 30일 유치원 유아들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눈높이에 맞춘 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 교통안전의 중요성, 교통안전을 위한 약속과 행동 요령, 올바른 도로 횡단 방법, 안전한 승용차 이용법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천중앙유치원, 해설있는 작은 음악회... 함께 노래해요

영천중앙유치원(원장 윤미옥)은 지난달 29일 해설이 있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악 앙상블 4중주는 해설사의 설명을 함께 들으며 클래식 음악과 동요를 감상하고 악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유아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문어의 꿈, 참 좋은 말 등을 현악 4중주의 연주에 맞춰 불러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초, 올해부터 전입생도 청솔희망학금 지급

영화초등학교(교장 김동철)는 지난달 28일 본교로 전입해 온 학생 2명에게 청솔희망학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청솔희망학회는 총동창회 동문들로 구성된 영화초등학교 입학생,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의회원 [5분 자유발언 / 시정질문]

권기한 의원, “의원 모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반대하지 않았다”

시의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반대 안해 문화교육복지센터 건립부지 경쟁구도 조성한 시 행태에 일침



권기한 의원은 지난달 15일 제2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이어 24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특히 “문화교육복지센터의 경우 경상북도 교육청 직속 기관으로, 도 교육청 예산 600억을 투입하여 2026년 9월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분야의 역점사업인 점, 건립비와 운영비 측면에서도 시비 부담이 없는 점, 기대 종사자가 80명 내외로 건립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교육청이 문화교육복지센터 건립 기초 조사를 했고, 영천시에 건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발언을 했다.

이어 권기한 의원은 “제228회 본의회 시정 질문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문화교육복지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을 동시에 건립하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

이라고 답변한 것과 달리 다음날 2월 16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도 교육청 문화교육복지센터 설립 위치 유의 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북도 교육청에서 검토 중인 망정동 우로지 인근의 부지는 용역 결과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소로 결정되었기에 위치 선정에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승인이 나기전 부지를 먼저 정하는 것은 순서에도 맞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부지를 탐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천시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으로 인구 25만의 경산시는 536억, 인구 9만 5천의 상주시는 460억 규모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준비하는 반면, 영천시 인구 10만에 타 지자체 예산 두 배가 넘는 1,200억의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권기한 의원은 “영천시의회 의원 모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반대하지 않고,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많은 예산이 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기상조로 판단, 영천시 재정에 부담 없는 문화교육복지센터 건립을 우선 주장했으며, 영천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김선태 의원, “답보상태 투자선도지구 현실적인 추진 계획 있는지”

집행부, 신성장 거점지로 조성 양질의 일자리창출 노력 요구



지난 24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김선태 의원은 “투자선도지구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사업진행 및 민·군 상생 복합타운 부지 선정”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다.

김선태 의원은 영천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민·군 상생 복합타운 이전 후보지로 금노동 투자선도지구 일원으로 3월 10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설명회에서는 동부동 우로지 남측 일원으로 발표 사업 후보지 선정에 일관성이 없고 의회에 공식적 설명없이 부지 변경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군부대 유치시 사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계룡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후 사업제안을 한 경북개발공사를 적합한 사업자로 보는 이유와 2022년 10월 25일 국토부 고시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였던 시행기간을 1년 연장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가고, 사업의지가 있는지와 올해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거나, 국토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하지 않아 투자선도지구를 위해 직선도로를 개설한다면 토지를 보상한

국비 100억을 반납할 경우 향후 신규 공모사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봤는지 물었다.

이에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군 상생 복합타운 이전 후보지는 당초 대구시가 선호한 투자선도지구로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현재는 국방부와 대구시 입지요건 기준에 따라 최적의 입지인 우로지 생태공원 남측으로 변경했고, 부지변경은 의원 개인별로 설명한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기존 투자선도지구는 당초대로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대구 군부대 이전이 확정되면 국방부 및 대구시와 협의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업장기화로 지가 및 물가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민간개발 단점보완책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또한 최 시장은 투자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북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2023년 8월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천의 신성장거점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매년, 국토부와 경북도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엄격히 점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확정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사업기간을 변경 고시하기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국비 100억은 반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상호 의원 “화랑설화 마을” 시비 144억원 투자 경쟁력 있나?

유스호텔 부지 대안 등 활성화 대책 필요 인근 축사악취 화랑설화마을 적합한 위치인가?



김상호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총사업비 483억 중 144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어 건립된 화랑설화마을이 2021년 9억 5400만원, 2022년 12억 5600만원 적자를 내고 있는 ‘화랑설화 마을’에 대해 명확한 테마여부와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영천시내에서 화랑설화마을로 이동하는 대중교통편이 없을뿐더러, 자차를 이용해도 찾아가기 힘든 점, 화랑

설화마을 인근의 축사 및 환경시설 등으로 일대 주민들마저 악취 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화랑설화마을을 위치의 적절성과 유스호텔 건립부지가 현재 유채꽃밭이라는 이름으로 잡초가 무성한 채로 방치되고 있고 악취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주와 비교했을 때 화랑이라는 주제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경마공원, 최무선과학관, 한의마을 등 연계 상품을 개발해 가족단위 관광객 위주의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동사거리에서 황정교까지 도로확장, 악취저감대책강구, 지역에 알맞는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주학 의원, “영천시 자금운용 적절성” 시금고, 3.1% 금리 지적

시금고, 협력사업비타 시군 비해 50% 못미쳐



“영천시청은 시금고에 그 어떤 고객보다 대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맡기는 우수 고객일 것이다. 영천시청이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영천시민의 이익에

도 직결된다”

지난 24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박주학 의원이 시정질문시 한 말이다.

박 의원은 영천시가 보유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에도 못 미치는 3.1% 금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예금자로서 적절한 금리를 받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최기문 영천시장은「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평가항목 및 배정기준이 6가지로 금고 지정에 있어 예금 금리만을 최우선 시 할 수는 없으며, 단순히 일반적인 대규모 예금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영천시 금

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는 점과 앞으로도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시금고로 선정된 은행의 경우 지자체 협력 사업비를 제공하고 그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전출하는데 영천시의 경우 1금고와 2금고를 다해도 그 총액이 1억 6천 5백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 영천시와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시·군과 비교해 적다고 판단되고 또 영천시가 시금고의 최대 고객으로서 합당한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최 시장은 1·2 시금고의 협력 사업비가 3년간 총 4억9천5백만 원이나, 영천시와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진 상주시와 김천시, 경산시의 협력 사업비가 12억~13억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은 맞지만 이자수입과 협력 사업비를 함께 고려했을 때 타 시·군보다 금고 수입이 많으며 다음 금고 계약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주학 의원은 시정 질문을 계기로 집행부에서 은행과의 금리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제대로 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며 시정 질문을 마쳤다.

배수예 의원,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결과 공개하라”

“감사결과외의 공개” 조항 부재, 개정 요구



지난달 27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배수예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고 이 같은 이유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반해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에는 감사결과 공개 조항의 부재로 시청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불가한데 있다고 보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배수예 의원은 최근 희망의 동지, 신병 어

린이집, 영천 희망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감독에 소홀한 집행부 행정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라는 말처럼 범죄도 시대에 따라 변하며, 현재 나랏돈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빼 먹을 수 있는지 경쟁에 접어든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배수예 의원은 집행부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하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요구하며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원칙으로 부정부패에 무관용으로 적극 대처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와 부패 인식 전환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임종택의 『숲과 人間』 ⑧



임종택

◆아프리카의 노벨평화상

왕가리 마타이, 마타이는 1940년 케냐의 한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 여섯째 중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다.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태어나 아프리카 그린벨트 운동의 창시자이자 동아프리카에서 여성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고 2004년 10월 그린벨트 운동을 통해 생태적으로 가능한 아프리카의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을 촉진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다.

왕가리 무타 마타이는 아프리카에서 여성으로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아프리카는 흑인의 나라 검은 대륙이라 알려져 있다. 모든 원주민은 흑색 계통의 유색 원주민으로 유럽의 이주민들인 제국 침략자들에 의해 이유 없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럽의 침략자들은 아프리카의 인종사를 유럽의 식민 정책과 노예 무역의 역사로 여겼다.

◆인류의 조상 아프리카...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

총,균,쇠(Guns, Germs and Steel)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 인류를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아프리카에는 이미 다섯 인종이나 살고 있었으며 그 중 세 인종이 원주민으로 사는 곳은 아프리카 뿐. 그리고 전 세계 언어의 1/4이 아프리카에서 사용된다고 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의하면 최초 인류의 출현 역사가 700만년 전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로부터 출발했으며 아프리카가 지구 인류의 출발점이었다라는 사실이다.

케냐는 당시 유럽 특히 영국의 식민 지배 하에 있었는데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로서 교육을 받아서도 안되고 오로지 남성의 지위와 선택의 영역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76년 나이로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중 이듬해인 1977년 자기집 앞 무화과 나무 일곱 그루를 시작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의 근원이 되는 나무심기 운동을 벌인다. 당시 케냐 식민 정부는 경제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숲의 나무를 무차별 벌목하는 과정에서 고향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베는데 대한 분노에서 출발한 것이 소위 그린벨트 운동의 시작이었다.

◆나무의 살아남기 전쟁이 시작됐다.

케냐의 산림은 무능한 식민 독재자의 묵인 하에 유럽 국제 자본주의의 수탈과 약탈의 대상이 되었는데 울창했던 케냐의 산림은 이들의 자본 폭력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하게 되었다. 그녀의 자서전 '위대한 희망'에서 마타이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내가 태어날 무렵 이히테 주변의 땅은 나무가 울창하고 녹지가 많았

'나무의 어머니' 왕가리 마타이의 기적... 그린벨트 운동

지구를 살려라! 나무심기... 人間 종말에도 계속돼야



왕가리 무타마타이-출처[www.les-amis-de-wangari-maathai.org]

으며 토양이 비옥했다. 우리는 미둔두, 미쿠, 미구모 같은 관목과 덩굴 식물, 양치 식물이 풍부한 땅에 살았다. 딸기와 견과류를 수확할 수 있었던 이곳은 비가 어김없이 정기적으로 내리는 덕에 어디를 가든 깨끗한 식수가 넘쳐났다. 신선한 물이 흐르는 드넓은 평야에 옥수수과 콩, 밀, 야채들이 자랐다. 사람들은 살면서 기아라고는 겪어보지 않았다. 땅은 유기물이 풍부한 짙은 적갈색으로, 습기를 머금어 촉촉했다"

마타이는 자서전 <위대한 희망>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림으로 남아 있던 애버데어 숲에 이번에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식민지 정부는 그 숲을 침해하여 외국 나무들로 이루어진 상업적인 농장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는 그 천연림이 연기 속에 사라져갈 때 거대한 햇불들을 본 것이 기억난다. 1940년대 중반 영국인들은 케냐에 많은 외래종 나무를 들여왔다. 나무의 살아남기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자연은 이질적인 환경에 반항하게 된다.

◆토종(재래종) 나무의 중요성

소나무는 북반구에서 수입했고, 유칼리나무와 블랙와들은 남반구에서 들어

왔다. 이러한 나무들은 재빨리 튼튼하게 자랐고, 새로운 목재의 출현과 건축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나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산림관들은 농부들에게 이런 나무 묘목들을 무상으로 나눠주었다. 농부들은 그 상업적인 가치에 감탄했고 재래종 나무들을 제거한 자리에 열렬히 그 나무들을 심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들이 결국 환경에 피해를 입혔다. 그 나무들은 빗물을 모으고 저장하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토착식물과 동물들을 멸종시켰다. 비가 올 때면 대부분의 빗물들이 곧바로 시냇물로 흘러내려갔다.

그 후 수십 년을 지하수 층은 현저하게 상승했고 마침내 강과 시내까지 마르거나 수량이 대폭 줄어들었다.」이 과정에서 새로운 외래종 나무를 심기 위해 산림에 불을 질러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햇불처럼 보였다고 기록했다.

◆토종나무 한 그루가 이룩한 노벨상

마타이의 분노와 조국 케냐에 대한 사랑은 한 그루의 토종 나무를 심는 일로 시작한다. 지난 30년 동안 마타이는 가난한 시골 여성들과 무려 3천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아프리카 전역에 심게 된다. 한 때 마타이가 일본의 한 종교 지도자인 이

케다 다이사쿠(SGI 회장)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였을 때 일본어인 '모타이나이' 즉 <함부로 써서 아깝다>라는 뜻인데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 말은 언제나 일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녹아 있는 말이다.

여성들의 이 작은 행동이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영원히 후손들에 물려 주고자 한 '학위 없는 산림파수꾼'-(마타이는 그린벨트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이렇게 불렀다.)들의 소중하고 눈물겨운 그렇지만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 아닐까. 그의 자서전 <검은 대륙의 초록희망>에서는 노벨상을 수상한 소회와 그린벨트 운동에 대한 의의를 케냐 정부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문명 앞에는 숲이,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그 후 케냐의 각 대학 교육 현장에는 환경학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전국 학교 3000여 곳에서는 나무 심기 묘목장이 만들어지는 등 그린벨트 운동이 전 아프리카로 번지게 되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바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 상통하는 일이다.

평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생태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프랑스의 작가 샤토브리앙은 '문명의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의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라고 말한다. 마타이의 그린벨트 운동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지라도 숲을 가꾸고 그 숲에 깃들여 사는 삶의 중요성을 지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의 그린벨트 운동은 보호와 보전의 차원을 넘어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 위기에 맞서 우리가 이 거대한 자연과 함께 이 위기의 속도를 늦추고 공생을 해야하는지 마타이의 나무심기 운동을 통한 평화와 공생의 메시지를 보고 배울 일이다.

마타이는 영원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녹색 지구를 살리라는 커다란 명제를 우리 앞에 던져주고 2011년 조용히 영면한다. 왕가리 무타 마타이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산림청-나무심기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영천시 강행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지 여론조작 의심 불법 현수막



돌·보·기

여론조작 의혹 뒷 배경이 누군지 밝혀야
권기한 의원, 회관건립 시기상조 못 박아
정체불명 괴 불법 현수막 수사 의뢰 주장
의회와 의원 누구도 회관 건립 반대 않아
市, 도 교육청에 부지 탐내지 말라 경고?

영천시와 의회가 『영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 건립』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의 건립 지지를 위한 출처 미상 불법 괴현수막이 대규모로 나붙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4일 오전부터 영천시청 인근과 시립도서관, 영천문화원 앞, 시내 주요 교차로 및 주요 거리에 수십 장의 괴현수막이 게시됐다. 본지가 제보를 받고 1시간30분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내 권역에만 38장의 불법 괴현수막을 확인했다. 외곽지와 읍면까지 합하면 줄잡아도 100여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현수막 형태는 출처도 없이 10여 개 문구를 반복 인쇄한 것으로 대부분 회관 건립을



요구하는 문구로 건립을 반대하는 의회를 꼬집고 건립을 강행하려는 영천시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의혹이 짙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신은 "시가 주장하는 회관 건립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가뜩이나 의회와 영천시가 이 문제로 헝거루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집착이 가지만 영천시를 지지하기 위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뭔가 뻔뻔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며 "뒤에서 여론조작을 할 게 아니라 자신 있으면 공개적으로 대시민 앞에 토론회를 하라"고 말했다.

반면 시청 공무원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특정 단체가 이같은 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배후에 영천시가 있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여론조작 배후에 영천시가 있다는 의혹은 따로 있다.

앞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회관 건립 강행 의지로 지난 2월 15일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 자리에서 권기한 의원의 시정 질문에 회관 건립 이유를 "시민이 원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흘 뒤 『새 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여론 조사를 유무선 전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가 『반드시 건립 찬성에 한 표를 꼭 부탁드린다』는 문자 폭탄이 나돌았고, 본지가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다음 날 즉각 "전화 여론조사를 취소했다"고 해당 부서가 밝힌 바 있다.

또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영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는 수십 명의 글이 올라온 데다 무소속 이영우 의원은 지난달 20일 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의사진행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의회 보도자료 배포 건을 들고나와 영천시가 건립하려는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한 하기태 의장과 의회사무국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6분간 본회의 실시간 방송에 노출됐다.

거기다가 또 지역 한 주간지에서 영천시가 지난해 8월 회관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으로 발주했던 설문 조사 결과(건립 찬성 81.1%, 반대 18.2% 결과)를 7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보도해 그 진정성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 신문은 다음호에 이같은 81.1% 건립 찬성 설문이 영터리 설문이라고 보도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영천시를 지지하는 괴 불법 현수막이 나붙자 영천시의회 안팎에서는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지 않으면 이같은 조직적 여론조작(의혹)이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그 배후를 영천시로 지목하고 있다. 시민 여론이 회관 건립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건립에 발목을 잡는 의회



를 비판하기위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유를 묻는 권기한 의원의 본회의장 질문에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답변 한 최 시장의 답변을 사후에라도 합리화 하려는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권기한 의원은 지난달 24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천시의 회관 건립 강행 의지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으로 건립 유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순수 시비 1200억 원 투입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80여 명의 직원이 상급하고 국비와 도비만으로 설립되는 경북도교육청 직속 공공기관인 문화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 700억 원 규모) 조성 위치가 영천시가 강행하려는 새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만을 위한 의지만 강조하면서도 道교육위원회 문화교육복지센터와 영천시의 문화예술회관을 동시에 건립하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최 시장의 답변과는 달리 답변 다음 날(2월 16일) 영천시는 "경북도교육감에게 도의 「센터 설립 위치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경북도의 센터 건립 예상용지(우로지 부근)는 영천시의 회관 건립 장소가 될 것 같으니 위치 선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히고 최 시장의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같은 공문은)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도(영천시가) 회관 건립 용지부터 선정한 것은 (경북도의) 센터 설립과는 무관하게 (영천시는) 그 자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하니 부지를 탐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우리 시의 제정 부담이 없는 경북도의 센터를 우선 건립하는 것이 순수 시비 1200억 원이 투입되는 영천시의 새 회관 건립보다 더 타당성이 있으니 영천시가 꼭 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면 군부대 유치가 결정 난 후에 건립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대 시민들을 향해서는 "우리 의회와 의원 누구도 영천시가 강행하려는 문화예술회관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영천시는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급한 사안에 우리시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한다"면서 "순수 시비 1200억 원 투입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기상조"라고 재차 못 박았다.

한편, 이번 정체불명의 괴 불법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 시의원 일각에서는 "분명히 여론조작 의혹이 있는 만큼 영천경찰서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불법 괴 현수막을 영천시가 배후에서 조정하지 않았다면 CCTV 관리자가 영천시인 만큼 영천시가 반드시 시민 여론을 호도한 불법 괴현수막 게시자를 색출해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해야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장지수 기자

119 허위신고 폭증, 한 해 985건, 3년 새 33.64%p 증가... '골든타임' 확보 방해



112 허위신고 작년 4235건, 3년 새 4.23%p↑
이만희 의원, 허위신고 방지 대책 마련 요구

경찰과 소방(112-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늘어나면서 출동으로 인한 위급 사안이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희(경북 영천, 청도·사진) 의원이 만우절(4월1일)을 앞두고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신고 건수가 경찰 1만9055건, 소방 5745건(소방차 81건, 구급차 5664건)으로 나타났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최근 5년간 허위신고 건수는 총 2만1565건에 연평균 43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은 2020년 4063건에서 2022년 4235건으로 4.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745건에 연평균 1149건으로 최근 3년간은 2020년 733건에서 2022년 985건으로 무려 34.3%p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해 두 기관은 모두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방침이지만 대응현황에서 경찰은 허위신고 중 88.3%인 1만9055건을 형사입건, 경범죄처벌(즉결심판)에 나선

반면, 소방은 불과 0.6%인 38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방의 경우 지난해 허위신고 985건에 대해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5년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 출동이 5745건(소방차 81건, 구급차 5664건)에 달함에 따라 골든타임 사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계부처에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지수 기자

■ 경찰청							
□ 최근 5년간 연도별 112 허위 신고건수 현황							
연도	허위 신고 접수 건수	형사입건	경범죄처벌(즉결심판)	민사청구 건수			
2018	4,583	980	2,979	-			
2019	4,531	948	2,914	-			
2020	4,063	954	2,579	-			
2021	4,153	955	2,807	-			
2022	4,235	990	2,949	-			
합계	21,565		19,055				
대응률: 88.36% (19,055 / 21,565 * 100)							
최근 3년간 허위신고 접수건수 4,063건에서 4,235건으로 4.23% 증가							
■ 소방청							
□ 최근 5년간 연도별 119 허위 신고건수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가
합계	1,070건	1,109건	992건	737건	950건	985건	5,783건
대응건수(과태료)	8	9	13	4	4	-	38
출동건수							
소방차	6건	13건	15건	14건	15건	18건	81건
구급대	1056건	1087건	904건	719건	931건	967건	5,664건
대응률: 0.66% (8 / 5,745 * 100)							
최근 3년간 허위신고 접수건수 737건에서 985건으로 33.64% 증가							

영천시 글램핑장의 비밀④ 4년 만에 실제 드러나 형사에서 지고 민사에서 반전



돋·보·기

영천시의 관리 소홀과 방만이 사건 키워 공무원 불법 알고도 묵인 증거 차고 넘쳐 관광진흥과-건설과, 몰랐나 무능했나? 관광진흥법 제4조①항과 4조④항의 차이 불법 시설물 방치-묵인한 공무원도 공범 경북도 감사 결과, 공무원 불법행위 밝혀 포렌식 값 살펴보니... 증거 파피 의심도 영천시, K씨 감추고 C씨 죄인 만들어 왜?

◆사건개요...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했다.

영천시(건설과)는 2016년 별내림촌 캠핑장(야영장업)을 준공해 같은해 2016.11.8. 보현리 주민들로 구성된 은하수권역위원회(K씨주도)에 무상사용 조건 위탁운영을 맡긴다. 이듬해 2017.1.19 영천시가 직접 (관광진흥법 4조1항=등록)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신규 시설 등록을 마치고 그 관리권을 영천시관광진흥과에 넘겼다.

국비 농식품부 이 사업(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는 수익이 있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법인단체에 운영을 맡기도록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영천시는 처음부터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비법인 은하수권역위원회(주민)에 위수탁을 맡기면서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지방공무원법 제48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캠핑장을 수탁받은 위원회는 별다른 수익이 없자 수탁 7개월여 만인 2017.7.28 캠핑장 구역내 완충지대(시설 불가지역)에 불법으로 글램핑장(10동)을 추가 설치해 숙박업을 시작했다. K씨에 의해서다. 이 때부터는 관광진흥법 제4조④항이 적용된다. ①항(등록)은 영천시의 의무이며 ④항(변경등록)은 추가 설치자의 의무다. 즉, K씨가 영천시에 변경등록(신고)의 의무자인데도 영천시는 알면서도 1년여 묵인해 오다 사고가 발생하자 C씨에게만 제4조①,④항(등록, 변경등록)을 동시에 적용하여 위법성을 물었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관광진흥과는 건설과의 이같은 변경등록 안내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거짓 보고까지 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된 2018.3.15 야영장 안전점검에서도 불법 글램핑 시설이 존재하는데도 적정하다며 허위 보고했다. 이로 인해 K씨는 2017.7부터 2018.4까지 변경등록 없이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하였고, 영천시의 허락 없이 2018.5 은하수권역 추진위원회 회원인 C씨에게 사업권까지 팔아 넘겨 C씨가 숙박업을 이어갔다. 모두 영천시가 알면서도 묵인한 불법 행위다.

이런 와중에 2018.7.28 손님이 술에 취해 불법 시설물인 글램핑 남측 수로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의 책임을 놓고 이 때부터 민·형사 고소고발이 시작돼 오늘에 이른다. 형사 사건에서 사고당시 운전자인 C씨에게 수로의 덮개를 덮지 않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법과 설계 규정상 C씨가 덮개를 덮는것이 오히려 불법이다.

◆ 공무원 일탈이 영똥한 범죄자 만들었다.

가장 먼저 관광진흥과가 나섰다. 영천시 관광진흥과는 그동안 K씨가 저지른 불법시설물 변경등록(관광진흥법 4조④항)을 1년여간 쉬쉬해 오면서도 사고가 나자 즉각 C씨를 고발했다. 사고 발생 12일만에 전광석화과 같았다. 그것도 2018.7.8 C씨를 타겟으로 "시설물을

정부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 194-11 (보현산) 은하수권역 별내림촌 캠핑장(야영장업)*사건의 실태가 민·형사 소송전 4년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영천시의 방만한 관리소홀이 주범이다. <*)사건=캠핑장 내 불법 글램핑시설에 숙박하던 관광객이 2018.7.28. 수로에 발을 헛디디 넘어지면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한 민·형사사건> 이 사건들은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을 축소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다가 최 모씨(이하 C씨)를 주범으로 확대 재 생산한 사건이라는게 경북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2017년) 당초 불법 시설을 설치한 당사자(이하 K씨)에 첫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 이같은 불법 시설을 설치하도록 방치하고 묵인한 공무원도 공범이다. 사고 직후 주무 관리부서인 관광진흥과가 K씨가 아닌 C씨에게 법을 확대 해석해 해당되지도 않는 관광진흥법 제4조①,④항(등록, 변경등록)을 동시에 적용하여 고발조치 하면서 C씨를 (기소유예) 범죄자로 만들면서 4년여를 끌어왔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단초가되어 후속 사건과 재판에 인용되면서 C씨는 형사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현재 진행중인 민사 재판에서 그 진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본지는 앞서 십 수차례 그 진실을 보도하면서도 영천시 글램핑장의 비밀①②③ 연재 후 오늘 최종 ④편을 보도한다. 4년여 본지 취재를 종합하고 입수한 민·형사 재판 기록을 토대로 영천시의 방만한 관리 실태를 고발한다. 특히 C씨는 이 같은 억울함에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십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최 시장은 부하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C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해 번번히 면담을 거절해 4년 동안 한번도 직접 만나주지 않았다. 민원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적지 않다. 모든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가 져야한다. 살신성인(殺身成仁). 부하 뒤에 숨어 도리어 부하를 방패삼아 자신의 안위나 권력을 갈구하는 리더에게는 언감생심 근접할 수 없는 단어다. 처음부터 민원해결 의지가 없었으니 이번 사건으로 총 7명의 부하가 징계를 받았다. 29세의 나이로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 부하를 살린故 강재구 소령이 보고 싶다. <편집자 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자인서를 받아 다음 날인 9일 즉각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관광진흥법 4조④항이 아닌 영천시가 이미 등록한 4조①항(등록)을 동시에 묶어 위법 혐의를 적용했다. 무지에서 발생한 일이다.

때문에 위법 조항과 고발 대상이 바뀐 것이다. 불법 글램핑 시설은 추가 변경된사항으로 법 제4조④항 즉 변경등록으로 고발대상이 아니다. 행정 처분 대상이며 1~3차 행정 계고 명령을 어기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그 때 고발해야 하는 순서와 절차가 남아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51조] 공무원의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의무 위반이다.

불법 글램핑 시설자는 K씨다. C씨는 운영자일 뿐. 시설의 수탁 주체도 K씨(은하수권역위원회)다. 고발 대상이 바뀐 것이다. 공무원이 2017.8부터 불법글램핑을 설치해 2018.5월까지 10개월여 영업을 온 K씨는 빼 주고 이를 인수받아 2018.5부터 사고일인 2018.7.28까지 2개월여 영업을 C 씨는 고소당했다. 이 고소로 C씨는 기소유예자가 된다.

◆경찰 수사는 문제 없었나?

경찰의 C씨에 대한 수사도 문제가 없지 않다. 설사 C씨가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야영장 등록자는 영천시다. C씨에 대하여 영천시가 고발장에 적시된 관광진흥법 4조①항의 대상이 아니다. (등록) 4조①항은 영천시가 이미 완성했다. K 씨가 저지른 관광진흥법 제4조④항도 행정처분 대상인데도 영천시와 같이 4조①항을 잘못 적용해 송치하고 이를 검찰도 그대로 인용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오류를 범했다.[관광진흥법 4조 및 제83조 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 지침]

영천시는 법령을 위반한 K씨와 글램핑 투자자 개인등을 먼저 고발조치 하여야 함에도 C씨 만 고발조치 하면서 행정 집행의 공정의무를 위반하고 이 때문에 사고 규명의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면서 영똥한 C씨를 주범으로 확대했다. 그것도 관광진흥과와 건설과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의도성이 없다고 볼수 없는 대목이다.

◆복마전의 시작

설상 가상으로 낙상사고의 피해자도 영천시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형사로 고소하게돼 이 때부터 피 터지는 법정 시비가 시작됐다. 갑작스럽게 기소유예자가된 C씨는 영천시와 K씨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한 공무원과 낙상사고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맞고소를 하게되면서 본격적인 복마전이 시작됐다.

모든 재판과 고소고발은 가장 먼저 결정된 C씨의 기소유예가 책임의 밑바탕에 깔렸다. 잇따른 사법 판정이 C씨를 또 범죄자로 만들었다. 낙상 사고피해자와의 형사 재판에도 C씨는 앞선 기소유예 혐의가 배경이 되

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을 받는다. 무고와 불법으로 서류조작까지한 공무원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아 책임이 면제됐다.

하지만 경북도 감사는 달랐다. 모두 공무원의 일탈과 방만한 관리가 주 원인이라고 못박았다. 때문에 경북도(감사)는 영천시에 기관경고(주의)처분을 내리고 관광진흥과 두명의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을 나머지 관광진흥과 사무관 1명과 건설과 4명 등 모두 5명에게는 훈계처분 명령을 지시했다. 이들 중 대부분 승진 하거나 주요보직을 받았다.

◆경북도 감사 결과가 진실이다.

감사 결과를 다시 되새겨 본다. 관광진흥과는 C씨를 고발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2018.8.8 별내림촌 캠핑장을 방문해 C씨에게 시설물 미등록 불법 영업을 했다는 자인서를받았다. 하지만 당일 출장명령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9일 화북면으로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명령 근무지와 다른 별내림촌 캠핑장에서 출장용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허위 출장보고서가 난무했다. 이같은 허위 출장보고서는 건설과도 마찬가지였다.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은 차고 넘친다. K씨가 처음 불법 글램핑을 설치한(2017.7) 후 개장식(2017.7.28)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양면장, 건설과장, 농촌개발팀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영천시는 (2017.7.27~7.29까지) 3일간 글램핑 사용료 140만원을 지급하고 4-H 연합회 세계잼버리대회(야영)를 개최했다. 즉각 K씨를 고발조치 해야했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쇠로 쉬쉬하며 1년여를 넘기다 사고가 발생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위반]

2017.7.4.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시설물(글램핑) "관광객 이용시설업 변경등록을 추진하라"는 의회 집행부 요구 조치내용이 명확하지만 관광진흥과는 이를 묵살했다. 더군다나 2017.12.27 은하수권역 운영위원회가 건설과에 불법 글램핑을 매입해 달라며 요구하자 이에 대한 답변(32485호)을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설치할 수 없는 영구건축물과 불법 글램핑을 철거하라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않아 불법을 알면서도 눈감은 사실이 드러났다.

◆첫 단추 잘못 채워 옷맵시 흐트러

결국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발뺌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위법 사실인지 몰랐다", "당초부터 있는 시설로 알았다"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특정인 C씨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죄인으로 만드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특히 특혜성 묵인 정황도 발견됐다. 별내림촌 캠핑장은 영천시의 행정재산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조례 없이 사용료 징수는 불법인데도 조

례없이 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총체적 불법 묵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는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C씨의 불법 운영에만 특정해 의도적으로 마녀사냥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모두가 리더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번 사건은 관광진흥과와 건설과가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서 결과까지 비뚤어진 사건이다. 이제라도 다시 단추를 풀어헤쳐 옷 맵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작금 민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화살은 이제 C씨가 아닌 K씨와 영천시 공무원이 알면서도 묵인한 방만한 관리 책임으로 향하고 있어 다행이다.

◆포렌식 값... 증거 파피

당초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지는 건설과에 현장 CCTV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 줄 단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고 당시 2018.7.28~2018.7.29까지의 영상을 포렌식한 결과 사고 날짜와 무려 9개월이 지난 2019.5. 경 데이터의 전체 용량의 99%가 사용되고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덮어쓰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누군가 쉬지않고 하드디스크를 가동했다는 의미로 4TB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넘쳐 앞선 영상을 계속해 밀어냈다는 의미로 시스템 분석기는 해석했다. 사고 당일의 영상을 복구할 수 없도록 보관되어 왔다는 포렌식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곰곰히 따져볼 일이다. 영천시도 영천경찰서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 줄 증거 확보에 책임을 갖지 못한 부분이다.

◆K씨의 보험금 부정수령?

앞서 K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사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K씨는 환자 가족 중 H씨와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4개월 20여일 만에 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사실을 처음에는 공무원과 C씨 등은 전혀 몰랐다. C씨가 운영하던 글램핑에서 사고가 났다면 C씨에게 가장 먼저 피해를 호소하고 배상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사고 4년여 동안 C씨는 낙상 사고자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 K씨와 소통해 왔다.

H씨와 K씨는 C씨의 영업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냈다. 거기다가 보험금 수령당시 이미 사고 3개월 이전 폐지한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직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보험금 부정수급으로 신고했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모든 사건의 진실은 형사 재판도 민사재판도 아닌 경상북도 2021.8. 처분 감사결과가 말해준다.

이만희 의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국민 안전 위협·정치 혐오 조장 안돼

국회에서 정당 현수 정책 토론회 개최 '공해' 아닌 '공감' 느낄 제도 개선 시급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것을 넘어 정치 혐오감까지 조장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법」(개정)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달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분별한 게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안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를 들어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15일 이내)만 적시하면 합부로 제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라는 미명하에 도

시미관을 해칠 정도로 대량으로 게시되는 가 하면 정부 비판이나 이념적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적시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 이만희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한국옥외광고협회 주관이다.

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김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민철 의원 등 양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현수막 설치업체 등 많은 정치권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현재 관련 법상 허가와 신고 그리고 금지 또는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이 초래하는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 그리고 도시 미관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지방정부를 비롯



한 행정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관리 방안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당 현수막이 국민 여러분께 ‘공해’가 아닌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더욱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자총 청도군 전영주 청년협의회장, 故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비 500만원 기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달 27일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회 전영주 청년협의회장이 故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백선엽 장군은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이자 6·25전쟁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구국영웅이다. 이우경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상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경북도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앞서 이우경 추진위원장은 발대식과 동시에 1억원을 기부한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당초 계획 동상건립비용 5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보훈처 1억 5000만원, 경북도 1억원 등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지난 발대식에서 이우경 추진위원장이 1억원, 이번에 전주영 자유총연맹 청도군지회장의 500만원으로 나머지 1억4500만원은 철곡군민 등을 중심으로 모금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추진위는 올해 7월 백 장군 3주기 추모식에 맞춰 다부동전적기념관 내에 故 백선엽 장군 동상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날 500만원의 동상건립 성금을 기탁한 전영주 청년협의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체,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모금이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뜻깊은 모금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청도군을 통해 전해왔다. 박한우 기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10기 온시디움봉사단’ 발대

“올바른 자원봉사 가치관 형성에 앞장”

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구홍우)는 지난달 25일 센터 교육실에서 2023 청소년 및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 온시디움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제10기 온시디움(꽃말: 순박한 마음) 봉사단의 서약은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임한다는 약속이다.

올해 핵심 사업은 탄소중립활동 봉사의 일환으로 버려지는 폐양말목을 재활용하여 편백나무안마봉을 제작, 인근 경로당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시디움봉사단은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올해 10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월 1회 이상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램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구홍우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제10기 온시디움봉사단이 집계된 청소년 자원봉

사에 활력을 더해줄길 바라며 봉사활동으로 올바른 인성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이웃 및 지역사회에 앞장서 줄것”을 당부했다.

김효정 기자

금호중, 제51회 춘계 전국 유도연맹전 ‘단체전 우승’

금호중학교(교장 김영한)가 제51회 춘계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겸 국제 유·청소년 파견 선발대회 남자중등부 단체전 1위로 우승했다고 지난달 29일 전했다.

제51회 춘계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6

일간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개최된 대회는 국제 유·청소년 파견 선발대회를 겸해 진행되었고 초·중·고등학교 남·녀 선수 2000명 이상이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KATA 경기로 일정을 보냈다.

금호중학교는 허재구 감독의 지도를 받아 개인성과 외에도 이번 남자 중등 단체 우승



의 쾌거를 거뒀다. 김효정 기자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 선수 선발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가 선발됐다고 전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2023년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에서 육상의 7종목에 94명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이들 중 내달 27일(토)~30일(화)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선발된 선수는 영천중앙초등학교에서 육

상 1명, 수영 4명, 영천동부초등학교 유도 2명, 포은초등학교 육상 1명, 탁구 3명, 금호초등학교 유도 2명, 육상 1명, 영천중학교 복싱 2명, 태권도 1명, 영천여자중학교 탁구 3명, 영동중학교 유도 1명, 성남여자중학교 육상 2명으로 총 23명과 금호중학교 배구팀이다.

주원영 교육장은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경북 대표선수들에게 체계적인 강화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제



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상대방 주소를 보정 어떻게 할까?

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왔다. 어떻게 할까?

답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소장이 피고의 주소로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 때 법원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한 사유(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때 원고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해야 한다. 7일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아 자칫 보정마감일을 넘길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 피고의 주소를 찾기 어려우면 일단 피고의 종전 주소로 재송달신청을 해서 시간을 벌어드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원고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의 변경 주소로

찾아 보정하면 된다.

주소 보정방법은 첫째, 재송달신청이다. 피고가 종전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출타해서 주간에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송달신청을 하면 된다.

둘째, 주소보정명령서에 의하여 새로 떼어본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가 종전과 달리 변경된 경우에는 새주소로 보정한다. 또 피고가 직장관계나 친척집 등에 일시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새 주소지(주택 등)에 없다면 피고의 직장주소나 피고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 또는 피고가 일시적으로 거쳐하고 있는 친척집 등의 새주소로 보정하면 된다.

셋째, 특별송달신청이다. 피고가 주간에는 출타해 야간에만 집에 있거나, 주중 내내 다른 곳에 있다가 휴일에만 돌아오는 경우라면, 집행관에 의한 야간특별송달이나 휴일특별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넷째, 송달방법의 마지막 수단은 공시송달신청이다.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해놓고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실무상 특별송달을 실시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있다.

참고로 피고가 주민등록만 해놓고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피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윤영민 회계문답]



윤 영 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한정승인제도의 상속 포기
상속개시 인지 후 3개월 내 결정해야
한번(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어
상속 포기 후 10년 이내 다른상속
-나타나면 상속세 납부의무져야

누군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포괄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오늘은 한정승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일반적인 상속인 단순승인은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형태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인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의 포기인데 이는 모든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하지만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불분명으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취소를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되어 그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처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경우 등에는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종철 칼럼



우 종 철
(본지 객원논설,
일요서울 논설주간)

‘학도병 정신’과 홍의장군 곽재우

강군을 이끌어갈 육해공군 사관생도는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이 바탕 되어야 한다. 지난 3월 2일 임관한 육사 79기 중 ‘6·25 전쟁사’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생도들(280여 명 가운데 75%인 210여 명)이 작년 가을부터 보충수업으로 이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적이다.

육사는 지난 2월 13일 “2024년 교육과정에서 ‘6·25 전쟁사, 전쟁과 전략, 북한학’ 등 안보관·역사관·대적관 관련 3개 과목을 ‘공통 필수’ 과정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좌파 정부에서 2019년 선택과목이 된 이들 3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붕괴 위기에 처하자 수많은 학도병이 자원입대해서 조국을 지켰다. 낙동강 방어선의 최대 요충지인 포항·안강·장사·영천 전투 등에 참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산화한 학도병들의 애국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구국(教育救國)’의 창학 이념으로 설립한 경주중고등학교 학도병은 1950년 7월 7일 1차로 170여 명, 2차로 50여 명, 3차로 100여 명 등 합계 320여 명이 참전했다. 전몰학도병은 현재 59명의 영령이 추념비 명판에 각명되어 있지만, 총 139명이 순국했다.

연전에 타계하신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필자에게 “대구·경북에서 대통령이 다섯 분 나온 것은 학도병들의 피값이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새롭다. 필자는 ‘학도병정신’의 근원은 삼한일통의 바탕이 된 신라의 ‘화랑정신’과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의 ‘충군애민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구한말 역사학자 박은식은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라고 했다.

文 정부가 뺀 전쟁史 尹 정부가 복원한다
이름도 없이 산화한 학도병 잊어선 안돼
교육구국(教育救國) 경주중·고 학도병 300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
홍의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의 정신

곽재우(郭再祐, 1552~1617)는 1552년(명종 7) 곽월과 진주강씨 사이에서 경남 의령현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현풍(玄風), 자는 계수(季綬), 호는 망우당(忘憂堂),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조식의 외손자이다. ‘천강홍의대장군’의 깃발을 들고 붉은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다녀 ‘홍의장군(紅衣將軍)’으로 불렸다.

곽재우는 33세 때 과거에 2등으로 합격했지만, 지은 글이 왕(선조)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자 평생 은거할 결심을 했다.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빠지자 40세의 곽재우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관군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기치로 의령현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노비 10여 명에 불과했는데, 그 수가 2,000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곽재우는 단기(單騎)로 적진에 돌진하거나 위장·매복 전술 등의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적을 교란하고 무찌르는 유격전을 구사했으며, 심리전·기만전술까지 능했다. 1592년 5월 하순경, 곽재우는 정암진(鼎巖津) 도하작전을 전개한 왜병을 맞아 대승을 거둬으로써 ‘정암진전투’, 경상우도를 보존해 왜군의 호남 진출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또한 그해 10월, 김시민의 ‘1차 진주성 전투’에 휘하의 의병을 보내서 승리에 조력하였다.

임란이 끝난 뒤 의병장들은 대체로 공훈에 합당한 포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다. 곽재우는 조정에서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거듭 고사하여 은거의 결심을 꺾지 않았다.

곽재우는 필체가 웅건, 활달했고 시문에도 능하여 저서로 <망우당집>을 남겼으며, 향년 65세로 망우정(忘憂亭)에서 별세했다. 일세를 풍미한 의병장이 남긴 것이라고는 단별옷에 거문고, 낚싯배 한 척이었다. 벽곡찬송(?穀餐松, 익힌 곡식을 끊고 솔잎만 먹음)과 은거로 탈속의 자유를 누린 망우당 선생을 경모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가락 영천시 종친회 제53차 정기총회 및 한마음축제

존경하는 가락종친 회원여러분! 계묘년 청명지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심과 가내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오며, 금년에는 코로나로 4년만에 『가락영천시종친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 축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종친, 문객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선조송봉과 위덕찬양, 종원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락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갖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년 4월 8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영천시생활체육관

초대가수*
윤수현과
몸배걸스

고 문 김종덕 김종말 김재웅 김병수
 자문위원 김달석 허정만 김영근 김영수 김대환 김영곤
 회 장 김 섭 직전회장 허진구 차기회장 김순덕
 부 회 장 김해섭 김시본 허득순 김응태 허의행 김종구 허주열 김현철 김영호 김천태 김영락
 김창열 김종열 김진수 김선태 김삼만 김태철 김종욱 김인환 김재일 김수용 김영숙
 감 사 김춘길 김복섭
 금호회장 김종열 총무 김영상 / 고경회장 김태출 총무 김형수 / 대창회장 김종우 총무 김기섭
 북안회장 김등용 총무 김염섭 / 신녕회장 김관식 총무 김창규 / 임고회장 김석암 총무 김의겸
 자양회장 김영해 총무 김용석 / 청통회장 김종득 총무 김종철 / 화남회장 김도영 총무 김태순
 화북회장 허기순 총무 김기태 / 화산회장 김술이 총무 김영운 / 동부회장 김천태 총무 김보은
 남부회장 김태만 총무 김현섭 / 서부회장 김시본 총무 김춘길 / 완산회장 김경태 총무 허정옥
 청년회장 김무섭 국장 김일용 / 부녀회장 김순옥 총무 김주완
 사무국장 김의곤 차장 김재동 허정구 조직부장 김희대 재무부장 김정희 총무부장 김경곤
 홍보이사 김병기 홍보부장 김성재 사무국장 연락처 010-3537-8064 사무차장 010-4114-3318

가 락 영 천 시 종 친 회 장 김 섭

의성김씨 영천종친회 제 60차 정기총회

- 일 시: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 모임장소: 영천 강변 분수대에서 08시 출발
- 가 는 곳: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개암선조 및 팔오헌 선조 사당 참배 세득사 향사 참석
- 내 용 : 의성김씨 영천종친회 정기총회 겸 선현지 탐방합니다. 개암문중 행사후 점심식사하고 닭실 안동권씨 총제공 유물관 관람후 예천읍 금당실 탐방하고 영천으로 귀가 할 계획입니다. 부탁은 종친에게 서로 연락하여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3. 4.

의성김씨 영천종친회 회장 김기출 배상
 사무국장 김종팔 ☎ 010-2501-6401